

# 이슈 리포트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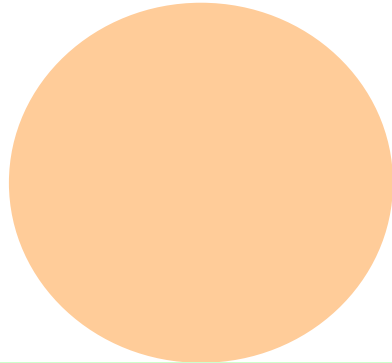
2004년 11월 넷째주(11/22 ~ 27)

## ◎ 주요내용

- |            |                             |
|------------|-----------------------------|
| - 세상돋보기:   | 데모할 국민 1천만명                 |
| - 노동자 세상:  |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착각'            |
| - 통신정책:    | SI시장 'KT돌풍' 분다              |
| - 정자동 6층에서 | 국회 상정 앞두고 총파업·기자회견·농성 등 잇따라 |
| - 만화방      | 시사 만화                       |



## 데모 할 국민 1천만명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며칠 전 한 국무위원은 사석에서 '지금 데모할 국민이 한 1천만명쯤 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이것이 정부의 솔직한 인식이라면 대통령은 간과 쓸개를 떼어놓고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데모할 국민 1천만명'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내년이 되면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합한 빈곤층이 1천만명에 달할 것이다. 유사시 못살겠다고 길거리에 쏟아져나와 데모할 국민이 1천만명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와 야당 모두가 이제 싸움을 멈추고 심각한 우리 경제의 현실을 돌아보고 머리를 맞대고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경제살리기일 것이다. 프레시안에서 박태건 편집국장의 글을 인용한다,

### 내우: "투기부양책의 필연적 귀결, 내수기반 붕괴"

빈곤층은 IMF사태직후인 1998년 폭증했다가 그후 '묻지마 주식투자' '카드 남발' '아파트 투기' 등 각종 경기부양책에 의해 낮아졌다가 지난해부터 또다시 급증세로 돌아서, 현재 전 국민의 10%를 넘는 5백만명으로 늘어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제 빈곤층 숫자가 정부 발표보다 많은 7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내년에 빈곤층이 전 국민의 20%이 된다는 것은 한국이 '남미화'의 과정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최근 참여연대 등의 실험을 통해서도 드러났듯, 4인가족이 월수 1백여만원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벼랑끝 극한생존을 의미한다. 매일 자살하는 사람이 30명을 넘고, 생계형범죄가 급증하며, 계층간 위화감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빈곤확산 현상'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속으로는 빈곤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밖으로는 "내년이 되면 내수가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꾀변이다. 빈곤층 급증이란 곧 내수

구매력의 붕괴, 더 나아가 내수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출 세일'에 여념이 없던 은행들이 요즘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을 해주라는 정부 말만 곧이곧대로 믿고 따르다가는 막판에 '폭탄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출회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세간의 위기감과 무관치 않다.

지금 경제는 위기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울 뿐"이라는 정부 주장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공허한 메아리로 맴도는 것도 당연하다.

### **외환: "환율 9백원까지 갈 수도..."**

문제는 심각한 내수불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마저 미국의 공격적 '약한 달러' 정책으로 IMF사태 이래 최대 위기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IMF사태는 다수 국민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수출기업들에게는 '복음'이었다. 달러당 7백원선에 머물던 원화가 최고 2천원까지 오르면서 예기치 못한 엄청난 '가격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후 지난 7년간 막대한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른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원화는 달러당 1천1백원~1천2백원대에서 머물러왔다. IMF사태때 바닥이 났던 외환보유고가 1천8백억달러를 넘어서고, 일부 수출대기업이 한국경제를 쥐락펴락하게 된 것도 근본적으로는 '약한 원화=강한 달러'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계기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원-달러 환율 세 자릿수 시대 다시 도래하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글로벌 달러약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내년도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원화 환율이 1천원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충격적 전망이다.

연구원은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올해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6천2백70억달러로 미국 GDP의 5.38%로 급증하면서 레이건정권 시절의 기록을 깨고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연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 85년 레이건정권 시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G7 재무장관들이 달러화에 대한 하락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던 '플라자 합의'에 이어 부시정권 2기에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말해 달러화의 대폭락, 원화의 초강세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경제석학인 김종인 의원도 "미국의 움직임은 볼 때 내년에 원화환율이 9백원대까지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외형상 원화 강세로 숫자상의 1인당 GDP가 급증하고 물가압력은 줄어들겠지만 실물경제는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원화가 초강세를 보이면 무역흑자가 격감하다가 끝내 적자로 전환하고 이 순간

부터 국가신용등급 하락, 주가 폭락 등 한국경제에 일련의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이 와중에 외국계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가 주가가 밀바닥까지 곤두박질치면 또다시 밀물처럼 들어와 혈값에 주식과 기업을 사들이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국부를 야금야금 빼갈 것"으로 우려했다.

IMF사태와 같은 외환위기가 재연되지는 않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IMF사태와 동일한 국부유출 과정이 되풀이될 위험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김 의원은 여기에다가 "부시의 재집권으로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컨츄리 리스크(국가위험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경제에 중대한 시련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당뇨병환자에게 포도당주사 놓기**

한국경제는 이처럼 안팎으로 중차대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 단기간에 푹 떨어지는 처방전도 없는 심각한 구조위기다. 정부도 내심으론 이를 잘 알고 있는 눈치다. 특히 내년엔 빈곤층이 1천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경제부처장관의 토로는 정부 역시 한국경제의 위기가 지난 수년간 정부가 써온 카드-아파트 등 '투기부양책'의 필연적 귀결인 '부의 양극화'에 따른 '내수 구매력 붕괴'에 있음을 비로소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보인다.

문제는 그러나 이처럼 병명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당뇨병 환자에게 포도당 주사를 놓는 식의 악성미봉책 일색이라는 점이다. 만성적 재정적자-야당의 반발 등으로 재정적자를 무한정 확대할 수 없다보니 대통령까지 나서 1백30조원대의 국민연금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동원하려는 것이 한 증거이며, 우리경제를 이처럼 골병들게 만든 핵심 주범이 부동산 경기부양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 4월의 재보선 등 정치일정을 의식해 또다시 기업도시, 골프도시, 한국형 뉴딜 같은 부동산경기부양에 올인하려 하는 것이 또하나의 증거다.

특히 전경련이 바람을 잡고 정부여당이 총대를 맨 기업도시법의 경우는 정경유착 의혹을 넘어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원화 초강세라는 대외적 시련을 국제시장에서의 '기술-제품경쟁력' 제고를 통해 극복하려 하지 않고 국내에서의 '부동산 투기차익'을 통해 만회하고자 하는 '박정희시대 패러다임'에 안주해 있는 게 아니냐는 탄식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국정의 또다른 책임자인 한나라당 역시 한쪽으로는 '부의 양극화'의 근원적 해법중 하나인 '아파트분양원가 전면공개'를 과감히 당론으로 채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극소수 부동산 투기세력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에는 극력반대하는 '이중성'을 보이는가 하면, 모든 경제정책을 좌파정책으로 몰아가는 색깔공세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한해에만 아파트값을 1백50조원이나 폭등시켜 분배구조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노무현정부가 어떻게 좌파정권이란 말인가.

## "한국경제가 걸린 병은 준(準)공황"

한국경제가 걸린 병의 병명은 '준(準)공황'이다. 공황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다. 기업이 아무리 상품을 많이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어져 어느날 경제가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리는 게 다름아닌 공황이다. 그런 면에서 극심한 부의 양극화로 내수 구매력이 붕괴했고, 경제장관의 말처럼 빈곤층이 1천만명으로 급증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황진입 국면, 즉 '준(準)공황'인 것이다.

공황적 위기의 대응책은 30년대 세계대공황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대통령이 택했던 일련의 정책처럼 비장한 것이어야 한다. 과도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목공사외에 구매력을 상실한 저소득층을 위한 과감한 이자감면과 부채만기연장, 재정지원 등이 뒤따라야 하는 동시에, 이에 필수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챙긴 특권층에 대한 과감한 증세가 필요하다.

왜 뉴딜추진시(1933~1939년) 루즈벨트대통령이 기득권층의 거센 저항이 일자, “내가 뉴딜을 하는 것은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려는 것”이라며 “드디어 대결의 때는 왔다. 특권계급은 단결해 나를 증오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한다”고 사자후를 터트렸는지를 위정자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경제당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절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좋아질 것"이라는 심리치료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편더멘털은 좋은데 심리가 문제"라는 식의 경제각료들의 주장이 그런 대표적 증거다. 이는 IMF사태 발발직전에 경제관료들에게서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다.

빈곤층이 1천만명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땀질로 일관하는 정책을 계속 취하려 한다면 '1천만 발언'을 한 경제장관 등은 더이상 '자리욕심'을 거두고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은 암환자를 수술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루즈벨트의 비장한 심정으로 경제위기 상황을 국민앞에 솔직히 밝힌 뒤 '길고 고된 재생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이같은 선택을 미룬다면, 경제가 정치의 목줄을 죄는 국면은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임을 위정자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 노동부 김대환 장관의 ‘착각’

노동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1963년 인력개발을 위해 탄생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 때문인지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기보다는 경제계를 대변해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노동부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오히려 업무상 가깝기로 치자면 복지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노동부라는 형태의 정부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러한 이유로 김대중정부시절에는 복지부와 통합이 논의되기까지 했다.

최근 노동부장관의 발언이 마치 경제계의 후견인을 자처하고 있어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분야의 소장학파로 알려져 왔던 김대환 교수가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그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이제는 그의 막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간 신문에서조차 그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8일 사설을 통해 김대환 장관의 ‘오버’를 질책하고 나섰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를 자극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계 스스로의 성과가 아니라 대학생, 벵타이부대, 야당, 재야 세력 등이 나서서 만든 민주화 공간에 편승한 것”이라며 “민주화가 노동운동만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있는 현 정부는 노동계에 빛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노동계가 빛을 졌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전국공무원노조와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파업을 예고해놓은 민주노총을 연일 비판하던 그가 이제는 노동계의 도덕적 근거마저 부인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아무래도 김장관은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노동행정을 책임지는 행정가이지, 윤리 강의를 하는 대학 교수가 아니다. 그의 말대로 노동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들과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대로 노동자들에게 고충이 있다면, 그들의 말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김장관이 할 일이다. 물론 장관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책 파트너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

을 질책하듯 훈계하는 것과는 다르다.

김장관의 발언에는 섬뜩할 정도의 오만함까지 읽혀진다. ‘도덕적 우월성’ 운운한 부분을 보자. 과거 정부는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못해 노동계 요구에 약했던 것으로 김장관은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현 정부는 이런 부담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밀어붙이겠다! 정말 그럴까.

최근 노동계 사태에는 김장관의 책임도 크다. 그는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에 강공으로 일관해 노·정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갔다. 이런 상태에서 산적한 노동현안을 어떻게 풀어갈까. 김장관은 공무원노조가 백기를 든 데 고무돼 의기양양해 하는 것 같으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경향신문 2004년 11월 18일 경향신문 사설]



## 외시장 'KT돌풍' 분다

과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기획하여 설계하고, 개별적으로 하드웨어를 조달하고 소프트웨어를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기기가 다양해지고, 더욱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이 거대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사용자는 어떤 기기를 선택해야 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시스템통합 즉, SI는 바로 그와 같은 필요성에서 생겨난 서비스로, 그 서비스에는 시스템의 설계, 최적의 하드웨어 선정에서 발주 및 조달,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시스템통합 사업자(system Integrator)라고 한다.

시스템통합 사업은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다양한 요소기술을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의 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

KT의 SI/NI사업단이 공격적인 사업 전략인 '트리플(Triple) 5'를 마련, SI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전자신문 기사를 통해 알아본다.

KT SI/NI사업단이 공격적인 사업 전략인 '트리플 5'는 오는 2007년까지 △500명 전문인력 확보 △국내 5위 SI업체 등극 △매출액 5000억원 돌파다. 사업단은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략적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2007년 국내 IT 서비스 분야 선두권 그룹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력 및 역량 강화=사업단은 연초 130여명에 불과했던 인력을 우선 연말까지 2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이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500명 규모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사업단은 현재 지능형교통시스템(ITS)·도시정보시스템(UIS)·전자자원관리(ERP) 등 전 분야에 걸쳐 5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채용 인력을 늘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쌍용정보통신 출신 임원을 영입해 전자정부팀을 신설, 향후 전자



정부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공공 분야를 담당하는 영업1팀과 국방 및 민간 분야를 담당하는 영업2팀 등 기존 조직과 타깃 시장별로 차별화를 꾀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사업단은 KT의 IT본부와 마케팅본부, 연구소 등의 내부 전문가 발탁 및 영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또 내부 효율성 극대화 및 글로벌 수준의 IT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의 조기 정착을 목표로 현재 국제공인 품질기준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레벨3 인증 획득을 위한 심사를 받고 있다.

◇선택과 집중=사업단은 단기적으로 통신망 및 네트워크 프로젝트 노하우와 인터넷데이터 센터(IDC) 등 IT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재해복구(DR)·주파수공용통신(TRS)·지능형교통시스템(ITS)·도시정보시스템(UIS), 민간부문에서는 텔레매틱스·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비즈니스상시운용체계(BCP) 등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기존에 KT가 강점을 갖고 있는 특화 사업을 통해 공공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금융과 제조 등 민간 부문 시장으로 입지를 넓혀 나간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컨설팅 비즈니스 역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업체와 전략적 제휴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보화신도시(U시티) 구축 계획에 발맞춰 컨설팅에서 제안과 설계 등 제반 활동을 전개해 각종 네트워크와 통신, IT 인프라 구축 부문에 참여한다는 전략이다.

이 밖에 사업단은 장기적으로 KT 글로벌사업단과 협력, 신도시 사업모델 등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도 도전장을 낼 방침이다.

◇전망 및 과제=사업단이 전방위에 걸쳐 파상공세를 호언하고 있는 것에 대한 SI업계의 전망과 평가는 교차된다. KT가 보유한 지명도 및 비즈니스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면 SI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SI시장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적지않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해 기존 구도를 깨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중첩되고 있다.

SI시장에 일대 변혁을 초래하는 파도가 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는 사업단이 기존 SI업체와 얼마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SI업계의 관측이다. 또 SI업계의 집중적인 공격과 견제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비즈니스 발굴도 ‘트리플 5’ 실현을 위해 사업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KT SI/NI의 한 관계자는“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전력 투구할 계획이다. 부족한 분야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는 물론 조인트벤처, 인수합병(M&A)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트리플5’ 실현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함께 다부진 의욕을 피력했다.



## 국회상정 앞두고 총파업 · 기자회견 · 농성 등 잇따라

비정규약법이 국회에 상정을 앞둔 상태에서 노동법개악 저지! 파견법 철폐!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비정규노조도 투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비정규약법은 비정규직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사실은 모든 정규직의 문제입니다. 파견법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규직의 자리를 축소하고 그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다는 것이며, 비정규직 확대를 법으로 보장받겠다는 사용자들의 요구이며 자본가들의 생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노동법개악 저지! 파견법 철폐!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비정규노조도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는 매일노동뉴스의 기사가 있어 조합원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다음주 비정규직 관련 정부 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이 본격화된다.

21일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치른 한국노총은 비정규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이미 여의도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고, 민주노총은 26일 ‘총파업’ 일정을 착착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이처럼 양 노총의 전면적인 투쟁이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10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이하 비정규공대위)도 다음 주를 ‘집중 공동행동 주간’으로 설정해 각계 각층의 공동행동을 조직할 방침이다.

비정규공대위는 이번 주 각 참여단체 회원들이 서울지역 주요 지하철역에서 대국민 선전전을 가진 데 이어, 다음주에는 각계 기자회견을 통해 ‘개악안 저지’를 위한 지지여론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22일 월요일에는 민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법조계가 국회 농성장 앞에서 비정규 개악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지원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화요일인 23일 오전 10시에는 민교협,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으로 구성된 학계, 학술단체가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같은 날 오전 11시,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권’ 차원의 비정규 문제를 부각시킬 예정이다. 또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 공대위 차원의 공식 문서를 인권위에 발송할 방침이다. 기자회견과 함께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다음주부터 ‘텔레이 농성’을 진행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적극적인 연대에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23일 비정규법안과 관련 독자적인 발대식을 갖는 데 이어, 김혜경 당 대표가 시민사회단체 순회방문 등을 진행하며 비정규 개악안 철회에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난 10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중인 비정규공대위의 김주환 상황실장은 “정부는 최근 여론조사 발표를 통해, 비정규법안을 알고 있는 국민이 20%대 임에도 불구하고 78%가 정부안에 대해 우호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대위에서 비정규 관련 자체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해 정부 여론조사와 비정규개악안의 허구성·기만성을 폭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정규공대위는 토요일인 2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비정규 노동법 개악 규탄 집중집회’도 가질 예정이다.

지난 9월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등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던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이하 전비연)의 비정규개악안 저지 투쟁 입장 역시 결연하다. 전비연은 24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노동법개악 저지! 파견법 철폐!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비정규직노조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삭발식’과 함께 간부들의 ‘구속결단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비연은 “비정규노조 대표자 및 간부들은 구속과 해고를 각오하고 개악안 저지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도 적극 결합할 예정인 전비연은 건설운송노조, 타워노조 등이 차량을 동원한 위력적인 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기사제공 : 매일노동뉴스]

만

화

방

